BARUN LAW
법무법인(유한) 바른

법무법인(유한) 바른

바른 Law & Policy Brief

Vol.3 | 2025. 09.

Summary & Insight

지난 8월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을 종합한 정부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경제성장 전략 등이 발표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방향설정이 이뤄진 기간이었습니다. 한편 국회는 9월부터 시작된 정기국회 기간을 맞아 행정부의 각종 정책을 점검하고 예산심의와 법률안 처리 등을 본격화할 채비를 갖추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기 행정부와 입법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그 방향을 올바로 전망하는 일은 변화될 법률과 정책에 맞추어 기업경영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필수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향후 전망

-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의 경제 및 안보 협력을 전략적 연계로 확대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국의 대규모 미국 투자와 관세 안정 약속은 경제적 부담과 기회를 제공하지만, 실질적 이행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과 민감한 의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향후 핵심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경제성장 전략 평가

-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청사진**으로, 향후 국정운영의 기준점이자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입법·예산 투입·정책 집행의 기본틀이 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 전략의 방향성 고도화 △대규모 공공 정책투자 시그널 역할 △녹색·디지털 전환의 동시 추진이라는 **주요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책 이행의 구속력 및 명확성 △재정 여력과 집행효율 △규제·입법 병목 △에너지원 확보 및 입지 제약 등의 **리스크 요인**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Summary & Insight

정기국회 시작 및 주요 일정

- 9월 1일 2025년도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국회 정기국회는 9월 1일 시작으로 100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기국회 기간 중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2026년도 예산안 처리 및 일반법률안 처리**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 정기국회는 지난 대선 이후 출범한 정부의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입법·예산 지원 교두보를 확보**해 안정적인 새로 출발한 정부의 공약이행과 국정과제 수행을 기틀을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대야소 상황에서 협치 문화가 복원되지 않는 한** 여야갈등과 여당 단독 의회운행의 모습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신규 발의 법안 분석

- **8월 중 새롭게 발의된 법률안은 모두 553개**입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1개월 의안의 제안이유에서 주요한 키워드를 추출한 결과 8월 **신규 발의 법률의 이슈 키워드**는 △근로자 △범죄 △일몰기한 △특별검사 △행정기본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 △온실가스 △부동산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법인세법의 경우 여야 의원이 상반되는 내용을 발의**한 대표적 입법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전 정부에서 진행된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 정책을 정상화 시키는 법안을 발의한 반면, 야당이 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 및 법인세 세율 인하 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 AI 시대 도래를 반영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개정내용을 각각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 모두 인공지능 기술발달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을 강조하며 기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의 명칭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바꾸고 인공지능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I. 주요 정책 동향

1. 한미 정상회담 결과 및 시사점

정상회담 개요 및 주요 내용

[주요 진행 사항]

-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회담 전 조성된 긴장 분위기(정치 상황 관련 언급 등)를 무난히 해소하며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한국 정부는 회담을 통해 경제·통상 안정화·동맹 현대화·신산업 협력 확장의 3대 목표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 했습니다.

[투자 및 통상 합의 주요 내용]

-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규모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분야는 AI, 반도체, 바이오, 조선, 원자력 등입니다.

투자 예시
대한한공의 보잉 비행기 103대 구매(362억 달러) 및 GE 엔진 계약(137억 달러) 현대자동차 그룹 투자 확대(260억 달러) LNG, 조선, SMR(소형 원자로), 희귀광물 협력 등.

- 양국은 비구속적(non-binding) 형태로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 산업 투자 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이에 상응해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지난 7월 타결된 무역 합의 방향이 유지되었으며, 미국은 추가 요구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안보 및 외교 의제]

- 한미 안보동맹 강화, 핵 및 방위비 분담 논의 등이 이뤄졌으나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의제는 이번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아 향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북한 문제에 대한 외교 공조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회담 의지 표명 등이 논의되어 10월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통상 관련 주요 시사점

[투자 확대 기반의 산업 협력 강화]

-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미국 투자 발표는 미국 제조업 및 전략 산업 회복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한국 기업에는 글로벌 공급망 확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세 인하 조건부 안정 확보]

- 15%로 인하된 관세율은 기존 KORUS보다 다소 높지만, 일본·EU 기업과 형평을 확보한 조치로 한국 수출업체의 경쟁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비구속적 합의의 유연성 및 리스크]

- 한미 정상회담 결과인 양국 정상간 합의 내용이 비구속적이라는 점은 향후 추진 과정에서 조정/지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안보·경제 연계 전략으로의 전환]

- 경제 이슈를 안보 협력과 함께 논의한 점은 한미동맹의 다차원적 강화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 및 추진 방향

과제	내용
기금 구조 구체화	3500억 달러 투자 기금의 운영 방식, 거버넌스, 산업별 배분 세부 계획 마련
관세 및 투자 협상 완결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사항 세부 조율 및 양국 의회 승인 과정 대응
조선·원자력 협력	한국 조선 및 SMR 기술의 미국 현지 산업화 방안 구체화
반도체·AI 협력 강화	삼성·SK Hynix 등 미국 반도체 생산 확대 전략 추진
안보 대화 지속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토지 소유 문제 등 민감 의제 논의 재개
중국·북한 외교 균형	미중 갈등 속 중국과 균형을 유지하며, 대북 외교 주도

정상회담 이후 주요 쟁점 사항

- 한미 정상회담 이후 주요 쟁점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예상 쟁점	내용
협상 지연 문제	기금 구조, 관세, 농업시장 개방(쌀·소고기), 자동차·반도체 규제 등 주요 분야에서 실무 협상 난항 지속
주한미군 기지 토지 소유 이전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요구와 관련된 민감한 주권 문제로 논쟁 예상
농산물 개방 압력	미국의 농업 시장 개방 요구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 필요
무역불확실성 지속	미국 정치 리스크, 정책 변동 가능성에 기반한 대비 필요

한미 정상회담 평가 및 결론

-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의 경제 및 안보 협력을 전략적 연계로 확대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 한국의 대규모 미국 투자와 관세 안정 약속은 경제적 윈윈 기회를 제공하지만, 실질적 이행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과 민감한 의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향후 핵심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경제성장 전략 분석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개요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향후 정부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은 향후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구체화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핵심 구성 요소]

-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리됐습니다.
- 3대 국정원칙은 ①경청과 통합 ②공정과 신뢰 ③실용과 성과로 발표됐습니다.
- 3대 국정원칙에 따른 5대 국정목표도 발표됐습니다. 5대 국정목표는 ①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②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③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④기본이 튼튼한 사회 ⑤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입니다.
- 국정기획위원회는 5대 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 코스피 5,000 시대, AI 3대 강국 도약, 인구위기 대응,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중점 전략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경제성장 전략

-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은 "진짜성장"의 패러다임 하에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투자 계획]

-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 달성을 위한 경제성장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계획으로 정부는 향후 5년간 210조 원의 투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정부는 재원 마련 원칙으로 '증세보다는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효율화'로 조달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혁신경제 중심 전략]

- AI 중심 R&D 투자 확대, 기술주권 확보 의지 강조하며 AI 30대 선도프로젝트 등 기술주도 성장 전략을 밝혔습니다. 또한 산업·문화 전략으로는 미래 신산업 육성, 콘텐츠·방위산업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 증시·기업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추진 의지를 밝혔으며, 코스피 5,000 목표 설정을 공식화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지배구조 개선, 소수주주 권익 강화 및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등을 중심 전략으로 채택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 강화]

-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강조된 것은 '기본사회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면책 강화, 생계 안전장치 확보(예: 기본생활안전법) 등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 전략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과 고령층 등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디지털 거버넌스]

- 외교안보 정책은 한미일 협력 강화와 대북 대화 복원 노력 등이 제시됐습니다.
-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 등으로 기술 정책 통합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기조 및 경제성장 전략 의의

- 이번 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청사진으로, 향후 국정운영의 기준점이자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입법·예산 투입·정책 집행의 기본 틀이 될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국가비전	국민주권 기반의 행복사회 구현
국정원칙 & 목표	신뢰·실용 중심의 정책, 혁신·균형 성장, 외교안보 강조
경제전략	AI 중심의 혁신경제, 210조 원 계획 투자, 증시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미래산업	반도체·바이오 등 기술통합 거버넌스 확보, 글로벌 경쟁력 확보
외교안보	실용적 대북·한미·한미일 협력 강화 추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경제성장 전략 주요 시사점 (Implications)

[국가 전략의 방향성 고도화]

- 5대 국정목표(혁신경제·균형성장·사회기본·외교안보 등)와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로 정책 골격이 제시됐습니다.
- 경제성장전략은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등 정량 목표를 제시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 것이 큰 특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공정책 투자 시그널]

- 향후 5년간 210조 원 추가 투자 계획을 전제로 재정·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는 것은 투자와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인프라·R&D·인구대응 등 중장기 과제에 재원을 배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와 관련한 사전적 준비가 필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녹색·디지털 전환의 동시 추진]

- 재생에너지 설비를 약 78GW(재생에너지 2배)로 확대, AI·반도체 등 디지털과 결합한 성장축 제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산업·전력·인허가 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관련 산업계에서의 면밀한 분석과 정책 대응이 요구됩니다.

우려점 및 리스크 (Concerns)

[재정 여력과 집행 효율]

- 210조 투자와 재정조정 병행의 현실성(세입 변동성·복지수요 증가) 및 민간투자 유인 설계가 관건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규제·입법 병목]

- 국정운영계획 상의 123대 과제는 입법·제도개편 수요가 큰 상황입니다.
- 규제 완화와 관련 입법 절차와 관련해 국회 협상상황·사회적 갈등 관리 실패 시 과제추진 지연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전원·입지 제약]

- 재생에너지·전력망 확충, 송배전·인허가 지연, 지역수용성 등이 조기 해결되지 못한 채 병목현상이 발생하면 정책목표 달성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정책 변화 (Expected Policy Shifts)

[산업·혁신경제]

- 국가 AI 전략 고도화(거버넌스 강화, R&D·데이터 인프라 확대), 반도체·바이오·방산·콘텐츠 등 전략산업에 맞춤형 지원이 예상 됩니다.

[자본시장, 기업지배구조 개선]

- '혁신경제'와 증시 신뢰 회복을 위한 시장제도·공시·지배구조 개선 패키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조)를 위한 입법 등 관련 제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및 기후]

- 재생에너지 '2배 확대', 전력망·저탄소 산업전환 지원, 수요관리·효율정책 강화가 에너지·기후 정책의 성과 달성을 위한 핵심으로 부각 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성장]

- 행정수도(세종) 기능 완성과 지역재정·세제 개편을 통한 균형성장 장치 강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업별 대응 전략 (Action Plan)

[반도체·AI·소프트웨어]

- (전략) 정부 R&D·데이터 인프라 사업과 연계한 공동 프로젝트 선점, AI 반도체(온디바이스·엣지) 로드맵 수립, 미국·EU 표준·안보 규범 준수 체계 마련 등이 있습니다.
- (체크포인트) 신설되는 국가 AI 위원회의 전략 사업 공고, 데이터·연구개방 범위, 반도체 인력·전력 인센티브 등의 시행에 대한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할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위원회 구성을 본격 추진

[바이오·헬스]

- (전략) 임상·허가 패스트트랙, 국가 바이오 거버넌스(전담위원회 등)와의 파이프라인 구축, 글로벌 공동 연구·CDMO 확대 등이 선제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 (체크포인트) 정부의 임상·규제혁신 과제, 인력·세제 지원, 해외공급망 연계 전략의 변화 포인트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차전지·신에너지·전력망]

- (전략) 재생에너지 2배 확대에 맞춘 ESS·인버터·송배전 기자재 포트폴리오 강화, 프로젝트 파이낸싱·RE100 수요 대응 등이 요구됩니다.
- (체크포인트) 에너지 믹스·송전선 계획, 입지·환경 인허가 개선, 계통접속 규칙 개편 등이 있습니다.

[제조·로지스틱스(자동차·조선 등)]

- (전략) 고효율·저탄소 설비투자, 디지털트윈·스마트팩토리 확장, 북미·EU 공급망 재설계(IRA·CBAM 대응)에 대한 전략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 (체크포인트) 수출금융·세제, 탄소규제·원가(전력·물류) 변화, 표준·안보 규정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콘텐츠·디지털 서비스]

- (전략) K-콘텐츠·플랫폼 해외진출 펀드 연계, 생성형 AI·IP 융합, 데이터 규제 샌드박스 활용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 (체크포인트) 문화·디지털 수출지원 프로그램, 데이터·저작권 규범 등의 영역에서 리스크 발생 요인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자본시장]

- (전략) 공시·지배구조 개편에 선제 대응(이사회·주주권 강화), 코스피 5,000 목표에 부합하는 IR·ESG 업그레이드 등이 필요합니다.
- (체크포인트)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 공시·지배구조 법제화 일정에 맞는 구체적인 사전대응과 외부 전문가의 협력이 요구됩니다.

Ⅱ. 주요 입법 동향

1. 법률안 발의 및 제출 현황

8월 법률안 발의 현황

- 8월 한 달간 새롭게 발의된 법률안은 총 553건입니다. 주간 발의 현황 및 상임위별 법률안 발의 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7/28~8/24 기준)

구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합계
운영위	2	2	4	2	10
법사위	7	11	14	17	49
정무위	14	4	10	7	35
기재위	29	24	18	26	97
교육위	6	6	6	3	21
과방위	12	3	4	3	22
외통위	2	1		1	4
국방위	2	3	1	3	9
행안위	21	16	31	26	94
문체위	5	5	1	3	14
농해수위	8	3	7	3	21
산자중기위	13	8	3	6	30
복지위	24	16	7	10	57
환노위	19	16	6	9	50
국토위	14	8	1	7	30
정보위					
여성위	1	1	1		3
기타			2	2	4
미확정			2	1	3
	179	127	118	129	553

2. 주요 쟁점·이슈 법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사협의회 원할한 운영을 통한 노사 공동이익 증진

▶ **대표발의 : 장철민 의원 (2025.08.0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위원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협의나 의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노사협의회가 사실상 사용자의 일방적 운영에 좌우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대표성 병존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근로기준법」은 경영상 해고시 협의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합의, 서면동의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선출 및 활동에 관하여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 및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임.

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민주적인 선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함과 더불어 현행법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위원의 활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활동과 조화되도록 하여 근로자 대표성의 병존으로 인한 혼란을 제거하고, 노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 및 법인세 세율 인하

▶ **대표발의 : 최은석 의원 (2025.08.0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발 관세협상 기조 및 미중 갈등의 지속으로, 세계 주요국가들의 자국기업 보호정책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국제경제 흐름 속에서 각 국은 치열한 기업 유치 및 자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민생 경제 활성화 등 자국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기업들의 투자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법인세 인하 노력을 경주하는 세계적 흐름이 거세지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p인하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 법인세율인 23.5%에 비해 높은 수준이므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고 해외 자본 유출을 방지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인세 인하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세계 주요국에 비해 높은 법인세율이 유지되고, 경직된 자본시장 과세 체제가 운영되면서, 기업 투자 의욕이 낮아지고 해외 자본 유출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현행 4개인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 2백억원 이하, 2백억원 초과의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8%의 세율을, 2억원 초과 2백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18%의 세율을 2백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함(안 제55조제1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세 감세 원상회복 및 조세 정상화

▶ **대표발의 : 윤준병 의원 (2025.08.2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지난 2022년 당시 윤석열 정권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였음.
- 그러나 법인세 최고세율 하향에 따른 세입 기반 약화를 우려하여 부자 감세 기조에 반대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는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씩 하향하였음.
- 이에 지난 2022년 103조 5,700억 원에 달했던 법인세수는 2023년 80조 4,200억 원, 2024년 62조 5,000억 원으로까지 감소했고, 이와 연계되어 2023년 56조 4천억 원, 2024년 30조 8천억 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 이에 윤석열 정권의 법인세 완화로 유발된 부자 감세 정책 이전의 법인세율 기준으로 원상회복하여 조세를 정상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와 탄소중립 체제 전환 구축

▶ **대표발의 : 어기구, 이상휘 의원 (2025.08.0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철강산업은 모든 제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기반산업으로서 특히 첨단 모빌리티, 수소 등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국가·경제 안보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임.
- 2023년 기준 철강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17.8%로 철강산업의 탈탄소화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이자 필수 조건임.
-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 등 탈탄소화 기술 혁신, 청정수소 및 무탄소 전력 공급 등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지만, 막대한 비용 소요 및 각종 규제조치 등으로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임.
- 향후 국내 철강산업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지속적인 저가 수입재 범람 등으로 국내 철강 공급기반이 약화될 경우 철강산업은 물론, 국내산업의 생태계 전반이 타격을 입게 되고 국가·경제 안보와 국민경제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
- 이에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철강산업을 탄소중립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AI(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따른 현행 산업 디저털 전환 촉진법 개정

▶ 대표발의 : 김원이 의원 (2025.08.0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발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등 대규모 민간투자와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 EU는 핵심 산업과 인공지능 기술 융합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채택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우수한 제조업 기술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산업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할 필요가 있으나, 인공지능 도입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 전문인력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아직 산업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도는 높지 않은 실정임.
- 이에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시행,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AI(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 대표발의 : 박성민 의원 (2025.08.1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전세계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미래 산업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수준에 비하여 산업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도는 아직까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산업계가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시행,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및 제8조 등).

Ⅲ. 국회 주요 일정 및 정책 세미나

1. 정기국회 주요 일정

[2025년 정기국회 개회 및 예상일정]

- 9월 1일 2025년도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국회 정기국회는 9월 1일 시작으로 100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기국회 기간 중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2026년도 예산안 처리 및 일반법률안 처리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2025년도 정기국회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상세한 일정은 교섭단체 협의 등에 따라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① 제429회 국회 정기회 개회식 : 9월 1일
② 국회인사청문회
: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9월 2일)
: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9월 3일)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9월 5일)
③ 교섭단체 대표연설 : 9월 9~10일
④ 대정부질문 : 9월 15~18일
⑤ 2025년도 국정감사
: (1안) 10월 13일 ~ 31일 (3주)
: (2안) 9월 29일 ~ 10월 24일 (3주, 추석 연휴 포함)
⑥ 예산안 심의 및 법안처리 본회의 : ~ 12월

2. 세미나(토론회) 주요 내용

[경제는 민주당 제27강 :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일시	2025년 8월 19일
장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경제는 민주당 / 김태년 의원실
발제자	홍성국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장
토론자	참석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주요 내용

이번 토론회는 「경제는 민주당」 시리즈의 27강으로,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I):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을 주제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패권 경쟁, 보호무역 강화 등 대외 불확실성과 함께 내수 침체, 수출 경쟁력 약화, 고물가·고금리 지속 등 국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진단되었다.

토론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경제동향 진단

- 세계 경제: 경기 둔화, 미·중 기술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강화
- 국내 경제: 내수 침체, 수출 산업 경쟁력 약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자산시장 변동성 확대

2.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방향

- 민생 회복 : 가계부담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실질소득 개선
- 혁신 성장 : 신산업 육성, 기술주권 확보, 디지털·그린 전환
- 재정·조세 정책 : 확장적 재정 운영, 공정 과세 체계 확립
- 금융·자본시장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자본시장 투명성·안정성 강화
- 포용적 성장 :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 성장 모델 구축

3. 정책적 함의

- 한국경제의 단기적 위기 대응뿐 아니라 장기적 산업·금융 구조 개편 필요성 강조
- 경제정책이 단순 경기부양을 넘어 사회적 신뢰, 공정성, 미래세대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BARUN LAW
법무법인(유한) 바른

관련 구성원

이영희 대표변호사 프로필보기

T. 02.3479.5756
E. yhlee@barunlaw.com

이용준 고문 프로필보기

T. 02.3479.7817
E. yongjun.lee@barunlaw.com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바른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바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우) 06181 T. 02-3476-5599 | E. contact@barunlaw.com